

##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2017년 11월 6일  
환경운동연합

- 차례 -

<p>1. 국토교통부</p> <p>1-1.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 2</p> <p>1-2. 남강댐치수능력증대 ..... 3</p> <p>1-3. 수자원공사 지원 ..... 4</p> <p>1-4. 지방하천정비(생활) ..... 6</p> <p>1-5. 지방하천정비(제주) ..... 7</p> <p>1-6. 지방하천정비(세종) ..... 8</p> <p>1-7.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9</p> <p>1-8. 제주 제2공항 건설 ..... 11</p> <p>2. 문화체육관광부</p> <p>2-1. 관광자원개발(생활) ..... 13</p> <p>2-2. 관광레저기반구축 ..... 15</p> <p>3. 환경부</p> <p>3-1.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16</p> <p>3-2.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17</p> <p>3-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18</p> <p>3-4.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 20</p> <p>3-5.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22</p>	<p>4. 산업통상자원부</p> <p>4-1. 청정화학핵심기술개발사업 ..... 24</p> <p>4-2.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25</p> <p>4-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26</p> <p>4-4. 특별지원사업 ..... 27</p> <p>4-5.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amp;D) ..... 28</p> <p>4-6.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29</p> <p>4-7. 전력산업홍보 ..... 30</p> <p>4-8. 전력해외진출지원 ..... 31</p> <p>4-9.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32</p> <p>4-10.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 33</p> <p>4-11. 방사성폐기물홍보 ..... 34</p> <p>4-12.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 35</p> <p>5. 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5-1. 핵융합기초연구사업(R&amp;D) ..... 36</p> <p>5-2.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37</p> <p>5-3.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amp;D) ..... 38</p> <p>5-4. SMART 고도화공동개발 ..... 39</p> <p>5-5.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amp;D) 40</p> <p>5-6.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amp;D) 41</p> <p>5-7. 수출용 소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amp;D) 42</p> <p>5-8.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43</p> <p>5-9.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44</p> <p>5-10.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45</p>
---	---

문의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충남서부권 가뭄은 지방상수원 복원으로 해결해야

1-1.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 일반회계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5033-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	-	-	800	800	800	-

### - 사업내용

- 충남서부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보령댐 광역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추진을 내용으로 밝힘.

### ■ 문제점

- 충남도의 물 부족은 ①소규모 지방상수원 폐쇄 ②태안/당진화력발전소가 원인임. 충남도는 보령댐 건설 이후 지방상수원 26곳 중 20개를 폐쇄하며 물 부족에 시달림. 광역상수도는 피해도 광역적이기에 또 다른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상수원을 복원, 증설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물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함.
- 보령댐의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32,842톤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뭄이 심한 계절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섰다운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이 사업은 B/C(비용편익비)가 1.05에 불과하고, AHP(다기준의사결정법)로도 0.641로 사업의 기준을 간신히 충족한 것에 지나지 않음.

### ■ 의견 : 전액 삭감

- 1)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 남강댐 단독사업은 무리수, 문정댐과 연계해서 결정해야

1-2. 국토부 하천계획과 / 일반회계 / 남강댐치수능력증대(5231-32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남강댐치수능력증대	-	-	-	900	900	900	순증

### ■ 문제점

- 치수증대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된 가능최대강우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이 남강 유역에서 과다 계산되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함.
- 남강댐 상류에 건설 계획이 있는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문제
  - 남강댐 85km 상류에 계획하고 있는 문정댐을 건설하면 남강댐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고 치수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국토부는 예산안 참고자료를 통해 “치수능력증대사업 착수까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최소 3년 이상 단계별 설계절차를 시행하므로 충분히 보완 가능” 하다가, 일단 댐 건설을 시작하고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 남강댐 방류수 갈등 심각

- 국토부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경남 맑은물 공급계획을 세워 하루 65만 m<sup>3</sup>의 용수를 확보해 부산권에 공급할 목적이 있음. 부산의 물 공급으로 남강댐 하류지역의 물부족과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지역갈등이 야기됨.
- 남강댐에서 방류하는 물로 사천만이 담수화돼 정착성 수산동식물들이 폐사하게 되어 영세어업인이 매년 13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어 생계를 위협당하는 문제도 얽혀 있음. 진주로 방류하게 되면 도시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방류방향을 높고도 지역갈등을 겪고 있음.

### ■ 의견 : 전액 삭감

- 남강댐의 가능최대강우량(PMP),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방법, 문정댐, 방류수 지역배분 등 문제점을 우선 논의해야 함.
- 남강 상·하류 친변저류지 조성, 자연친화적인 물길조성, 하천연안 침수대책, 홍수총량제 도입, 기상예측능력 강화, 댐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필요함.

## 4대강사업 부채상환, 수자원공사부터 책임지게 해야

1-3.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 일반회계 / 수자원공사 지원(5331-305)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수자원공사지원	340,000	277,800	277,800	340,000	315,000	37,200	13.4

### ■ 문제점

#### - 수공, 4대강사업 투자 만장일치로 결정하더니

- 2009년 9월 29일, 수공은 215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하며, 투자 사유를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라고 밝힘.
-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김건호 사장은 유례없이 연임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원들에게 225%의 성과급을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임. 지난해 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억800만원, 임직원은 933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sup>2)</sup>2007년 1조 6천억 원이던 부채가 2012년 13조8천억 원으로 750% 증가했고, 수공 임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함.

#### -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모두 비용분담 중

- 4대강 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부채 원리금은 12조 4,000억 원 (원금 8조원)으로 이 가운데 6조 8,0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2010년부터 이미 2조 1,400억 원을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작년, 동 사업은 3,400억 원의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예산 심의에서 622억 원이 감액되어 실 집행액은 2,778억 원으로 조정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3,083억 원, 2013년 3,481억 원, 2014년 2,9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다 2015년 5조 8,00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과 댐 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함. 2015년 반영된 6조 1,306억 원의 손실은 4대강사업 손실임.
- 부산·대구·경남·경북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21개 정수처리시설의 200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대구 매곡정수장, 부산 덕산정수장, 창원 칠서정수장, 김해 삼계정수장, 양산 웅상정수장은 원수가격 인상과 더불어 고도정수처리비용까지 떠안은 상황임.<sup>3)</sup>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 원)

2) 2017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3)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보도자료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2,778	21,394

**- 수자원공사, 현실적인 부채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채무원금 5조6,000억 원을 자체 상환하기로 결정하며, 2015년 9월 발전사업에서 935억원, 단지사업에서 928억원 등 매년 2,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 등 순이익이 989억 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한 추가대책이 요구됨.4)
- 발전사업, 단지사업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에서도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5)을 내는데다 확장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수도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의견 : 전액 삭감**

- 부채는 수자원공사의 일반 수익으로 상환해야 함
-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
- 4대강 수문 개방을 위해 양수시설을 조정 예산 5,000억 원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발생함.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인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참고**

수정의견	수정이유	심사경과
<p>- 김동철 위원 △340,000 전액</p> <p>- 박홍근 위원 △340,000 전액</p> <p>- 추혜선 위원 △340,000 전액</p> <p>- 진선미 위원 일부 감액</p>	<p>동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비용을 지원(원금 839억 원, 이자 2,561억원)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예산통제권 훼손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부담과 자체수익 발생에 따른 자체자금으로의 상환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p> <p>◆ 김동철 의원 3,400억 원 전액 감액 :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결정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p> <p>◆ 박홍근, 추혜선 위원 3,400억 원 전액 감액</p> <p>◆ 진선미 위원 일부 감액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최근 5년간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 원 등 자체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체자금으로 4대강 사업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비용 우선 상환 필요</p>	<p>◆ 심사결과 : 보류</p> <p>◆ 보류사유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p> <p>◆ 지적사항 (주광덕 위원) 수자원공사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국민 이해 가능 (김태년 위원, 이계호 위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실패 책임과 자체수익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지원 재검토 필요 (김동철 위원) 여야정의 충분한 협치를 거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성일종 위원, 추경호 위원) 수자원공사 상환일정 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한 지원기준 준수 필요 (윤상직 위원) 수자원공사가 100% 정부 출자기관인 점에서 국가 부담이 되므로 원안 유지 필요 (박홍근 위원) 수자원공사의 자산매각, 구조조정, 수익발생 등에 대한 자구 대책 필요</p>

4) 2017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5) 2016 국정감사, 국민의당 주송용 의원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1**

1-4. 국토부 하천계획과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생활)(5334-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생활)	-	-	-	-	542,520	542,520	

- 전국의 지방하천(제주·세종 제외)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99~'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이며, 2018년 예산은 5,400억 원임(제주, 세종 포함 5,600억). 국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입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 함.

##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2

1-5. 국토부 하천계획과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제주)(5332-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제주)	-	-	-	-	12,060	12,060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국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입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해야 #3

1-6.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 지특회계 / 지방하천정비(세종)(5333-30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	638,350	578,700	578,700	555,500	-	-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		2018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비율
지방하천정비(세종)	-	-	-	-	5,420	5,420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하천을 치수·이수·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정비함. 국비 50%/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원됨.

### ■ 문제점

□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생태하천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다시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 예비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

□ 국토정책연구원이 2013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하천 정책의 정상적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정책의 도입이 화두임. 자연형 하천정비, 하천환경복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함.

### ■ 의견 : 대폭삭감

- 치수대책으로는 도시 내 투수율 증대, 천변저류지, 홍수터 조성 등 기후변화시기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하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적 철학에 기반 해야 하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함.

## 경제성 없는 흑산도 소형공항 백지화, 쾌속선 도입으로 정책전환

1-7.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 교통회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3538-302)

담당 :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244	20,852	20,852	20,775	16,788	△4,064	△19.5

#### - 사업내용

-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서 관광지인 흑산도 지역(신안군) 숙원 사업으로서 교통오지 불편해소,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하다는 입장
- 흑산도 소형공항은 50인석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00m 급 5대 주기 가능한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이 필요함.

### ■ 문제점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낮음

-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봄. 보고서가 도출한 흑산도 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0.1%로 크게 낮은 수치임.

#### - 경제성 없음

- 서울지방항공청의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이결과는

-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를 12,500회로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현 목포항과 31km(자동차 35분거리)의 무안국제공항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이용자수와 연간공항운행횟수<sup>6)</sup>이다. 하지만 흑산도 소형공항을 이용할 이용자수가 무안국제공항 이용자보다 높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흑산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비해서 목적 통행이 적어 이용자가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적자는 개항이후 계속되어 2016년 89억6700만원이었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광주공항 운영적자는 2013년 25억5000만원에서 2014년 22억97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6)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2016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330회, 이용자는 321,675명이다.

- 목포 주민 및 장도 영산도 등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섬 주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쾌속선임

-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장을 만들면 충분하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총 사업비 1,833억원 규모의 흑산도 소형공항 예산의 일부로 쾌속선을 도입할 경우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목포를 비롯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섬들이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대로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더욱 어려워지고, 인근 영산도나 장도의 경우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정온한 섬의 생활환경과 생태관광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됨

#### -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11.18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보류된 이유는 첫째, 환경부의 적폐행위로 인한 ‘부동의권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조건부협의로 뒤집힌 지적’, 조계종의 ‘수행환경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제시, 지역주민 위원이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큰 변수로 작용. 국방부도 전술비행기 충돌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민·관위원 다수가 제3의 합리적 대안(헬기 운항, 선박 운항 강화 등)의 비용평가가 제시되지 않은 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가능성자료, 공항입지 대안별 검토자료 등이 부실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철재보전을 이유로 보완 제시한 바 없음

### ■ 의견 : 전액 삭감

#### - 사업 폐기 및 쾌속선 도입 요구

-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은 보완서를 통해 경제성이 40%나 낮아졌으며, 또한 인근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이후 만성 적자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거나 매우 낮다. 따라서 국가예산낭비와 자연생태계 훼손을 가져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단,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초고선의 도입에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환경파괴 · 거짓용역 · 도민배제 제주제2공항 전면재검토

1-8.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 교통회계 / 제주 제2공항 건설(3538-304)

담당 :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 010-3693-3971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제주 제2공항 건설	-	(4,700)	(4,700)	1,160	1,160	1,160	순증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4.87조원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사업규모 : 연 2,500만명 처리 목표의 신공항 건설(활주로(3,200m×60m), 터미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 문제점

-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14.12 ~ ‘15.11)>의 공정성 논란 및 허위 데이터 문제
  -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 이 제외되면서 의혹 제기
  - 해당 연구 총괄기관인 한국항공대학산학협력단은 대한항공 소유의 학교재단 ‘정석인하학원’ 소속임. 즉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용역으로써 공정성 상실
  - 용역 보고서 상에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차이(제주 15.3일/성산 13.0일/정석비행장 33일)가 나는 것으로 작성 됨. 그러나 제주/성산의 관측자료는 기상청 공식자료며 정석비행장 관측자료는 정석비행장 자체 측정치임.
  - 당초 용역 보고서에는 정석비행장 관측자료가 ‘성산기상대 자료라고 허위 기재’ 되어 있었고, 201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이 단순 오타라고 해명.
  - 즉, 해당 용역 보고서는 제2공항 추진의 근거로 인용될 수 없고 제2공항 후보지에 정석비행장을 포함한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함
- 해당 지역주민과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추진
  - 제주도의의회는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을 통과시킴
  -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상봉 의원(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명백

히 했다” 며 “제2공항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9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데일리리서치) 현재 제주공항 확장 의견이 33.6%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24.4% 보다 높게 조사됨

- 공항 예정 부지에 천연동굴 18+  $\alpha$  곳 존재, 동굴분포 지대 위에 활주로 건설은 안전에 치명적
  - 작년 11월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천연동굴(모낭케굴) 추가 발견, 올해 10월에도 예정지 600m 지점에서 신규 동굴 발견
  -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보고회에서 예정지 주변 동굴은 7곳이라고 축소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문헌 상 성산읍에는 18곳의 천연동굴이 존재하며, 최근에도 추가 발견이 이어지고 있음.
  - 천연동굴 밀집 지역에 공항 활주로 입지 불가.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 하중을 견딜 수 없고,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국가적 손해임

### ■ 의견 : 전액 삭감

- 제주도민의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정식비행장을 포함한 공정한 대안 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문제인 대통령 공약처럼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 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즉 2018년 예산안에 순증된 설계·감리비 11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산편성 외압에 대한 사전 차단 필요

2-1. 문체부 관광정책과 / 지특회계 / 관광자원개발(생활)(4151-300)

담당 :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B-A)	(B-A)/A
관광자원개발(생활)	270,731	239,678	239,678	254,667	254,667	14,989	6.3

#### - 사업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생활)사업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원영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등이 주된 사업이다.
- 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정상 부근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5km이다.

### ■ 문제점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오색케이블카 예산 편성 외압 우려
  -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생활)의 경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하지만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예산 587억원 가운데 229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국비 지원으로 요청하여 왔다.
- 2016년 배재정 전 의원(국무총리 비서실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 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 지역 수익사업에 국고지원 있을 수 없다.
  - 현재 설악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수익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원영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의 사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향유권 주장은 과도한 이용 외면한 무모한 결정
  - 설악산은 현재 33개의 휴양 및 편익시설과 숙박,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이와 연계된 교통운수시설이 30개가 설치되어있다. 이미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한 다양한 이용방식과 문화재 접근 향유 활동이 존재하며 오히려 보전과 관련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sup>7)</sup>.

- 2061년 기준 연간 365만명 방문(일일 평균 1만명), 권금성 케이블카(한병기/박근혜 일가 독점운영)연간 50만명 이상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으로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전지역,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위상 및 관리 강도에 비해 과다한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sup>8)</sup>

#### - 문화재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2차례에 거쳐 부결

-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이다.

#### - 문화재청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허가처분 입장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다.

### ■ 의견 : 쪽지 예산 거부

- 천연보호구역 지정 취지 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산 편성 외압이 있을 경우(229억원) 편성하면 안 됨

7) 2017.10.20.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보존과이용의 조화에 대한 종합의견'

8) 2017.10.20.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보존과이용의 조화에 대한 종합의견'

## 실패한 경인운하를 확장하는 MB의 그림자, 한강운하

2-2. 문체부 관광개발과 / 관광기금 / 관광레저기반구축 (4161-31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정부안(B)	(B-A)	(B-A)/A
관광레저 기반 구축	13,840	40,240	40,240	11,966	11,966	△28,274	△70.2

#### - 사업내용

- 레저관광 활성화 : 900백만원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 162백만원
-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 538백만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6백만원
- 관광 투자유치 지원 : 300백만원
- 관광자원화 지원 : 9,650백만원
  -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00
  - 오산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2,000
  - 청주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1,400
  -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3,250

### ■ 문제점

#### □ 실패한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착장 조성 사업.

-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구간의 개통 5년차 (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7천 톤으로 애초 목표인 853만7천톤의 0.08%에 불과함. 수공은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인천터미널만 이용한 화물 운송량 75만5천 톤을 경인운하 운송량에 포함해 화물 운송량을 76만2천톤(8.9%)이라고 발표함.9)
- 경인운하 투자금 회수율은 2017년 8월 기준, 54.6%임. 그러나 항만시설인 마리나는 8.0%, 부두 임대는 8.9%, 관리권 매각은 5.5%에 불과함. 평균 투자금 회수율이 54.6%까지 높아진 것은 국고지원(100%), 단지 분양(96.1%) 등 경인운하 항만시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가 포함됐기 때문임.10)
- 경인운하의 한강구간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까지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추측컨대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임. 기-승-전-한강운하.

### ■ 의견 : 부분삭감,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 삭감

9) 2017 국정조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10) 2017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 터무니없이 부족해

3-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환특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234-304)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31,883	38,247	38,247	49,637	45,781	7,534	19.7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가운데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으로 7,297백만 원을 요구함.
- 구체적인 사업목적으로 4대강 보 구간의 수생태 변화, 수질, 수량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함임을 밝힘.

### ■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통해, 16개 보의 생태계, 수질, 수량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환경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하는 처리방안을 정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6월,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6개보에 한정해 수위를 일부 낮추는데 그친데다. 농번기가 끝나는 10월 중 추가로 수문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나 양수시설 조정 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음.
- 올 해 신청한 7,297백만 원은 4대강 보의 처리방안만을 위한 예산에 불과하며 그 구체성도 부족함. 현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밝힌 4대강 보의 양수시설을 개선을 위한 5,000억 원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은 상황임.

### ■ 의견 : 대폭 증액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예산 대폭 늘리고,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시설 조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박근혜 적폐 사업, 탑다운 방식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못해**  
 3-2.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환특회계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1131-311)

담당 : 물순환팀 안숙희 간사 010-2732-7844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7,638	64,902	64,902	63,721	63,253	△1,649	△2.5

○ 물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진흥 시설, 실증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박근혜 전 지역구(대구 달성군)에 입지함.

**■ 문제점**

□ 2014년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60%만을 집행. 2015년 현액집행률은 9.9%에 불과해 83억 원을 이월, 7억 원을 불용했음. 2016년 현액집행률은 63.2%에 그쳐 366억 이월, 27억 불용. 2017년 7월 현재 현액집행률 11.1%로 대폭 삭감 불가피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등	예비 예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4	300	300					300	183	60.9	60.9	78	39
2015	10,000	10,000	78				10,078	997	10.0	9.9	8,364	717
2016	98,585	98,585	8,364				106,949	67,638	68.6	63.2	36,570	2,741
2017	64,902	64,902	36,570				101,472	11,309	17.4	11.1		

□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공약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클러스터 시설을 완공해서 실제 산학연 연계한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환경부, 그것도 식수원 개발관리라는 단위로 시행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

□ 특히 낙동강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하류에 미치는 수질 영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

**■ 의견 : 전액 삭감**

- 4대강 사업처럼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함.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1**  
 3-3.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특회계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2,844	264,274	288,184	452,279	352,279	64,095	22.2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 지원 : 255,000백만원 ← ( '17년) 206,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 (산출내역)
    - 전기차 240,000백만원 = 20,000대×12백만원(정액)
    - 전기버스 15,000백만원 = 150대×100백만원(정액)
- 전기자동차 보급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수요소인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13,070기) : 89,505백만원 ← ( '17년) 54,750백만원

**■ 문제점**

- 자동차의 대기오염(미세먼지) 배출은 근본적으로 배출 원인과 피해자의 불공평성(Fairness)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의 지향성은 정책 효율성 보다는 교통환경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함.

-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10년간 약 80-90% 강화되었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으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는 10년간 약 30% 감축, 자동차 배출영향요인 중 자동차 등록대수만 유일하게 증가

- 특히, 경유 승용차는 171만대(2004년)에서 403만대(2014년)로 크게 증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등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이 오히려 차량구매 촉진하는 정책은 아닌지 검토해야 봐야 함.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o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의견 : 대폭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등 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함
- 전기 버스, 화물차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며, 전기차 개발과 충전소 확대는 자동차 완성차 등 대기업이 투자해야 할 영역이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강제해야 함. 충전소의 경우 공공 충전소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에 주유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요함.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2**  
3-4.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트회계 /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1633-302)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46,392	52,492	52,492	42,492	32,490	△20,002	△38.1

- 사업내용
  - o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안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CO<sub>2</sub>감축을 유도
  - o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을 결정(녹색위, '09.7월)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마련('10.4월)
  - o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기를 '15.1월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13.4월)
  - o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대안 확정·발표('14.9.2)
  - o 배출권거래제와의 동시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을 '20년 말까지 유예하고, 친환경차(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 등) 지원 및 직접규제 강화
  - o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 31,500백만원 ← ('17년) 51,500백만원 ('18년) 하이브리드차 60,000대(0.5백만원/대) 및 플러그인차 300대(5백만원/대) ← ('17년) 하이브리드차 50,000대(100만원/대) 및 플러그인차 300대(5백만원/대)

**■ 문제점**

- 재벌대기업위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예, 재벌대기업위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국민은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혈세 낭비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음
  - o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원래대로 앞당겨야함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o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o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

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 의견 : 대폭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등 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 함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급 목표를 거의 달성할 만큼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졌으므로 사업 축소해야함 내역사업인 '구매보조금 지급' 315억원 중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300억 전액 삭감

##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퍼주기 #3

3-5.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에트회계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1631-303)

담당 : 생활환경팀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8,365	18,575	18,575	18,585	18,585	10	0.05

#### - 사업내용

- o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 o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 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 **3,585백만원** ← ( '17년) 3,575백만원
    - 산출 내역 : 27.5백만원(내연기관 가격차액 55백만원×50%) × 130대 + **10백만원(?)** = 3,585백만원
  - ②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 **15,000백만원** ← ( '17년) 15,000백만원
    - 산출 내역 : 3,000백만원 × 10기 × 50% = 15,000백만원
- o 수소승용차 1만대( '~20) 보급 및 수소충전소 충전소 100기(~' 20) 구축 목표 달성 불가

2014	- 수소연료전지차 12대 보급, 수소충전소 1개소 준공(광주 진곡)
2015	- 수소연료전지차 41대 보급, 수소충전소 1개소 준공(충남 내포)
2016	- 수소연료전지차 73대 보급, 수소충전소 4개소 설치중(광주, 울산2, 경남 창원)

### ■ 문제점

#### - 현대자동차만을 위한 특혜예산

- o 특정 기업의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국가 예산 투입되지 않음.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만들어져야 함. 더구나, 수소자동차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만 제작·판매하고 있음. 정부는 수소자동차의 안전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함.

#### -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o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o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 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전기승용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등 시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함
- 수소차 보급실적 부진하고, 수소연료 조달 방안이 미흡하며,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과다한 점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대부분 현대차 계열사 및 협력사에 보급)

**노후발전소 수명연장과 해외수출 목적의 청정화력 예산 부적정**

4-1. 산업부 전력산업과 / 전력기금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5901-304)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연 국장 010-9963-9818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32,566*	22,543	22,543	23,857	23,857	1,314	5.8

\* 201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60억 증액 반영(16.08.17)

- 사업내용

목적: 화력발전의 선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수출산업화, 노후설비 수명연장과 성능향상

- ①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16,195백만원):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화 및 CO2 저감
- ② 청정화력 융합혁신기술개발(3,900백만원): 타분야 기술(NT및IT)과의 융합
- ③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트베드구축(3,000백만원): 개발부품의 실증 테스트베드

**■ 문제점**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로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장기적 석탄발전 비중 축소 정책과 상반됨, 해외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소를 주로 수출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취약국이며,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저개발국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금융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의 연구개발에 전력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타당성이 약화됨.
- 이 예산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를 이행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의 자체 재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방안이 타당

## 현실성 없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예산 삭감

4-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력기금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R&D)(5901-301)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연 국장 010-9963-9818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연구개발출연금	216,288	203,777	203,777	214,941	214,941	11,164	5.5%

- 사업내용

⑧ 석탄이용 :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관련 가동률 향상, 핵심기술 국산화 및 석탄가스화 응용 분야 확장 기술개발 4,328백만원(\* 17년) → 3,928백만원(\* 18년)

### ■ 문제점

- 태안 IGCC 실증플랜트는 석탄발전소보다 효율이 떨어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실효성 검증이 요구됨. 태안 IGCC는 2016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가동 성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음
-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관련 연구개발에 전력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근거가 약화됨
- 연구 보고에 따르면, IGCC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비해 비용이 35% 높으며, 1990년대 개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로 나타남.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사례는 8개에 불과하며, 18개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 취소되거나 5년 이상 유예 상태임
- 국제적 재생에너지 분류 기준과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기술을 신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바, IGCC와 같은 문제적인 기술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를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 의견 : 부분 삭감 (석탄이용 3,928백만원 중)

- 태안 IGCC 실증플랜트의 가동 성능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 해당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향후 일몰함

## 탄소포집저장(CCS) 예산 삭감

4-3. 산업부 에너지신사업정책과 / 에트회계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5701-301)

담당 : 에너지기후팀 이지연 국장 010-9963-9818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에트)(R&D)	169,382	181,312	181,312	185,842	185,842	4,530	2.5

- 사업내용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발전소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후 압축·수송하여 육·해상 지중에 저장(CCS)하거나, 포집한 CO2를 이용하여 탄산칼슘, 플라스틱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CCU)하는 기술개발에 19,799백만원 요구

### ■ 문제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함
-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사업은 국내 조건에 현실성 없으며, 저장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석탄발전소의 확대 및 유지를 전제로 한 CCS 기술개발 정책은 석탄발전소 비중 축소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해 재검토돼야 함
- 화석연료 기술개발에 전력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20 회원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약속에 따라 해당 예산의 지원을 폐지해야 함

### ■ 의견 : 부분 삭감 (19,799백만원)

## 주민갈등 유발,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특별지원사업 전액 삭감

4-4.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특별지원사업(5451-3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특별지원사업	125,652	110,000	110,000	78,600	78,600	△31,400	△28.5

#### ○ 사업내용

- 신규 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득증진과 복리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전과 1기가와트 이상의 유연탄 발전소 등 786억원 지원

### ■ 문제점

-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입지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책정한 비용임.
- 돈을 앞세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음.
-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을 세금인 돈으로 매수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은 비윤리적임.
-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서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를 위해 집행된 현재와 같은 특별지원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단,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

### ■ 의견 : 전액 삭감

-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를 위해 집행되었던 특별지원사업 전액 삭감

## 원자력계 싹짓돈, 중복 편성된 원자력R&D 예산 전액 삭감

4-5.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5901-303)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출연금	73,568	68,625	68,625	62,137	62,137	△6,488	△9.5%

#### ○ 사업내용

- 원전 전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 안전, 설비 및 운영성능, 해체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개발, 원자력 기초기반기술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연계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621억3천7백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에 집행함.

### ■ 문제점

- 원자력 관련 연구는 원자력연구원(과기부 예산)도 있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도 집행되고 있으며 독점적인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도 매년 2천억원 가량의 연구비용을 집행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49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수요관리 등에 집행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계의 품수임.
- 이미 여러 곳에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분야만 특별히 이중, 삼중 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음.

### ■ 의견 : 전액 삭감

## 핵융합 관련 예산 전액 삭감, ITER 타당성 검토 먼저

4-6.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6002-310)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	27,300	27,300	34,334	34,334	7,034	25.8%

#### ○ 사업내용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비로 230억2천만원과 ITER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113억1천4백만원 등 총 343억3천4백만원

###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될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1백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매년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비(진공용기 본체·포트, 조립장비, 삼중수소, 전원장치 등)를 230~270억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함.
-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전기안전 등의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어 출연이 필요하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의견 : 전액 삭감

-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집행

## 탈원전 정책 무색한 원전홍보 49억 전액 삭감

4-7.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전력산업홍보(7401-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력산업홍보	7,268	7,362	7,362	6,993	6,993	△369	△5.0

#### ○ 사업내용

- 전기절약, 신재생에너지, 전기안전, 원자력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홍보 지원
- 전력시장홍보(한국전력거래소) : 185백만원
  - 전기절약홍보(한국에너지공단) : 956백만원
  - 전기안전홍보(한국전기안전공사) : 963백만원
  - 원자력홍보(한국원자력문화재단) : 4,889백만원

###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자력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전체 홍보비 중 70%가 원자력홍보비임.
- 원자력홍보는 원전사업자의 자체 홍보로도 충분함.

### ■ 의견 : 부분삭감

- 원자력홍보(한국원자력문화재단) : 4,889백만원

## 투자하면 원전수출이 가능하다고? 이미 낭비한 880억으로 충분

4-8.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 전력기금 / 전력해외진출지원(7402-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4,281	4,621	4,621	3,028	3,028	△1,593	△34.5

#### ○ 사업내용

- 원전 해외 수출과 전력분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880억원 기투자했으며 2018년 30억2천8백만원 추가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2,438백만원
- 전력수출산업화 : 600백만원

### ■ 문제점

- 세계적인 원전시장은 사양산업이고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체 원전기술을 가진 나라들이며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만 가능함.

- 현재 논의 중인 영국은 원전 수출이 아닌 원전사업 21조 투자이고 체코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 가능성은 적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전망이 어두움. 베트남은 일본이 상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추가 금융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포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진 가능성 등으로 원전 건설을 포기한 상황임. 사실상 원전 수출은 요원한데도 계속 비용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UAE 원전 수출 이후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이 제로였던 사업에 계속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임. 이미 들어간 880억원으로 충분함.

### ■ 의견 : 부분삭감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2,438백만원

## 신규원전 X, 원전수출 X, 목적상실한 원전인력양성에 국비투입 X

4-9.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력기금 / 원전현장인력양성원(7408-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민간자본보조 (320-07)	1,864	2,964	2,964	3,016	3,016	52	1.7

#### ○ 사업내용

- 원전수출 및 국내 원전증설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현장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을 위해 30억1천6백만원

### ■ 문제점

- 원전 수출은 가능성이 없고 국내 원전은 신고리 5,6호기 이후 더 이상 증설하지 않기로 한 만큼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건립 목표가 사라짐.

- 계획된 것이라고 필요가 없어진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임.

### ■ 의견 : 전액 삭감



## 원안위 허가 전에 돈부터 투입하는 원자력계 불법관행 뿌리뽑아야

4-10.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5631-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월성원자력 환경관리 센터건설	31,500	68,990	68,990	57,660	57,660	△11,330	△16.4

#### ○ 사업내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 576억6천만원

### ■ 문제점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과 원자력안전법상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 단층이 분포한 곳으로 지진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가 하루 수천톤씩 발생하는 곳임.
- 1단계 동굴처분 시설 건립 시에도 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운영허가 1년이 안되어 배수 펌프가 고장나고 2년이 지난 현재는 핵폐기물 드럼통을 저장하는 사일로 내벽에 수백 곳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음.
- 2단계 처분시설은 천층처분 시설로 동굴처분 시설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시설임.
-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미리부터 투입하여 설계와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의 원자력계의 관행임.

### ■ 의견 : 전액 삭감

- 안전성 확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 없이 돈부터 투입하는 원자력계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함. 인허가 전에 비용 투입 중단.

## 핵폐기물의 위험성 은폐, 주민 매수에 악용되는 폐기물홍보비 삭감

4-11.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방사성폐기물홍보(5633-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방사성폐기물 홍보	2,267	2,428	2,428	2,307	2,307	△121	△5.0

#### ○ 사업내용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정, 안전관리의 필요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소통으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
- 이를 위해 중저준위 방폐물 홍보를 위해 언론광고 2억6천4백만원, 초청홍보 1억원, 홍보물 제작 9천만원, 설명회 6천만원, 지역협력사업 4억원, 기타경비 1천만원 등 총 9억2천4백만원
- 사용후핵연료 공의 캠페인 6억원, 언론광고 4억4천8백만원, 홍보물제작 8천만원, 설명회 8천8백만원, 전시홍보 1억2천2백만원, 설문조사 2천만원, 기타경비 2천5백만원 등 총 13억 8천3백만원

### ■ 문제점

- 방사성폐기물 홍보가 그동안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보다 문제제기된 핵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미화에 언론광고비를 집행해왔음. 언론광고가 핵폐기물 안전보관과는 상관없으며 언론홍보는 세금 낭비임.
- 주민들과 소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부터 해야 함.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차 처분인 천층처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용후핵연료는 행정부에서 제공론화를 결정한 상황이므로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홍보를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음.

### ■ 의견 : 부분삭감

-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후핵연료 홍보물 제작 1억8천만원을 제외한 2,127백만원 삭감

###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공약 이행 전에 부지선정 비용 지출 모순

4-12. 산업부 원전환경과 / 방폐기금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5643-3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확보	-	1,100	1,100	200	200	△900	△81.8

#### ○ 사업내용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할 목적으로 부지 조사·선정, 시설 건설·운영, 관련 설비 제작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하는 11억원 중 2017년 집행 부진했던 ‘부지기초조사용역’ 2억원

#### ■ 문제점

-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은 한국사회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임. 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른 2020년까지 부지 선정은 가능성이 희박하여 현 정부에서 재공론화 방침을 세움.
- 2017년 초 국민안전처는 전국 활성단층 지도 제작 연구 용역을 25년 계획으로 시작함.
- 활성단층 지도도 없던 상황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면서 공사 중간에 활성단층과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
- 전국 활성단층 지도 제작을 위해 연구용역이 시작된 상황에서 비슷한 중복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음.
- 특히, 전국에 해당하는 활성단층 지도 제작에 25년이 걸리는데 단순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극도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임.
- 2017년 부지기초조사 용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 의견 : 전액 삭감

-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전에 부지 선정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 활성단층 지도 제작 용역이 시작된 상황에서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한 부지기초조사 용역은 갈등만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전액 삭감

### 핵융합 사업 타당성 재검토하고 에너지전환R&D에 적극 투자해야

5-1.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1160-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핵융합기초연구사업	6,517	6,264	6,264	6,264	6,264	0	0

#### ○ 사업내용

-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에 62억64백만원

####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원을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의견 : 전액 삭감

-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기술에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할 것

**허황된 핵융합 관련 사업, 연구기획평가 4억7천만원 삭감**  
5-2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1346-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우주핵융합연구 기획심사평가사업	1,420	1,520	1,520	1,520	1,520	-	-

○ 사업내용

- 우주기술개발사업 및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협약, 관리 및 성과활용 등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우주기술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1,050백만원
-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470백만원

**■ 문제점**

- 핵융합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임
- 우주기술개발과 핵융합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될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견 : 부분삭감**

- 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470백만원

**우주기술과 ‘파이로-소듐’ 단일사업으로 묶는것은 원자력계 꿈수**  
5-3. 과기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일반회계 /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1436-404)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	8,395	8,000	8,000	8,043	8,043	43	0.5

○ 사업내용

- 미래 원자력협력체제 구축 : 800백만원(2017년) → 800만원(2018년)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체제 운영 강화(800백만원)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 3,700백만원(2017년) → 3,700백만원(2018년)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700백만원)
  -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3,000백만원)
- 다자/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 1,641백만원(2017년) → 1,290백만원(2018년)
-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 300백만원(2017년) → 397백만원(2018년)
-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 1,349백만원(2017년) → 1,449백만원(2018년)

**■ 문제점**

- 우주기술 도입 촉진과 제4세대 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원자력국제 협력사업을 교묘히 섞어놓았음.
- 원자력기술은 우주기술이 아니며, 친원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꿈수에 지나지 않음
- 우주기술개발과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정상임
- 타당성과 경제성 없고 방사능 오염을 증대시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효율성도 없는 제 4세대 원자로와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예산은 낭비임.

**■ 의견 : 부분 삭감 (3,800백만원)**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체제 운영 강화(800백만원)
-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3,000백만원)

### 한국도 사우디도 불필요한 SMART원전 예산 전액 삭감

5-4.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일반회계 / SMART 고도화공동개발(1448-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3,420	3,420	6,840	6,840	3,420	100

#### ○ 사업내용

- SMART 원전의 해외수출을 위해 수요국(사우디)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 및 설계 등 추진

#### ■ 문제점

-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금지 협정이 맺어져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 SMART 원전 입지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불가능함.
- 불필요한 연구개발비임.

#### ■ 의견 : 전액 삭감

### 기초연구도 아닌 상용화라고? 돈 먹는 하마 핵융합R&D 전액 삭감

5-5.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일반회계 /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82,796	83,761	83,761	85,141	83,429	△332	△0.4

#### ○ 사업내용

- 향후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 능력 및 독자적인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소 운영기 지원 834억2천9백만원

#### ■ 문제점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기초연구도 아닌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임. 그동안 핵융합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의견 : 전액 삭감

## 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1

5-6.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에특회계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148,608	146,041	146,041	144,608	144,190	△1,851	△1.3

### ■ 문제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따로 조성되어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 연구지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자력연구원 지원비가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더구나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 위험이 큰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는 예산낭비이므로 전액 삭감해야 함.

### ■ 의견 :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부분삭감 (24,733백만원), 나머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이관해야 함

-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 19,360백만원
- 원자력 인재육성·정책지원 및 기술협력 중 원자력 국제투명성 제고사업 : 1,190백만원
- 장비구입비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 283백만원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 3,900백만원

## 건설허가도 취득 전 기자재 구매? 수출용 연구로 예산 전액 삭감

5-7.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지특회계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1440-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22,231	3,880	3,880	1,050	800	△3,080	△79.4

#### ○ 사업내용

- 최신 연구로 핵심기술 실증과 연구용 원자력 수출을 위한 원자로 자력 설계·구축을 위한 8 억원

### ■ 문제점

- 경주지진으로 고리 및 월성 인근 지역 지질정밀조사가 재 실시 될 때까지 상업용을 비롯한 연구용 원자로 건설 잠정 중단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계획만 세우고 있으며, 2014년 예산 실행률 36%, 2015년 18%, 2016년 39%에 불과함
- 건설허가 취득 전, 기자재구매 예산 집행하는 것은 원자력계 관행에 불과함

### ■ 의견 : 전액 삭감

## 허황된 핵융합 이제 정신차려야, 산업부-과기부 중복사업 전액 삭감

5-8.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미래원자력팀) / 원자력기금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1139-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연구개발 출연금	20,000	28,500	28,500	38,400	35,736	7,236	25.4

#### ○ 사업내용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ITER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18년도 ITER 운영을 위한 우리나라 분담금 357억3천6백만원(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우리나라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비로 230억2천만원과 ITER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113억1천4백만원 등 총 343억3천4백만원 예산 배정)

### ■ 문제점

- 가능성 없는 사업에 똑같은 명목으로 산업부(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와 과기부에서 매년 7백억원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임.
- 핵융합은 에너지 공급에서 필수 기술도 아니며 실현가능성도 없는 기술임.
-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임.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될 만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음.
-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이 오랫동안 낭비되어 왔음. 핵융합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매년 1백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매년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비(진공용기 본체·포트, 조립장비, 삼중수소, 전원장치 등)를 230~270억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함.
-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전기안전 등의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어 출연이 필요하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의견 : 전액 삭감

## 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2

5-9.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34-401)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연구개발활동비등	144,889	135,288	135,288	130,900	129,582	△5,706	△4.2

#### ○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 원전 사고예측·평가,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등 안전 연구 40,056백만원
- (미래형원자로) 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33,000백만원
- (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장기가동원전 해체 및 폐기물 처분기술 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49,420백만원
- (원자력원전) 원자력분야 핵심 원천기술, 기술선점 효과가 큰 기반기술 확보 7,106백만원

### ■ 문제점

-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 기존핵발전소에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규원전인 소듐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하는 상황
-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논리에 불과
-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부지에서 대전 연구소로 위험한 손상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야 함
-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관련 소통절차가 부재
-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연구과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때 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
- 오히려 원전 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기술개발, 대피 시물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이 필요함.

### ■ 의견 : 부분삭감 82,420백만원

- (미래형원자로) 33,000백만원
- (핵연료주기) 49,420백만원

## 제2의 4대강,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삭감해야 #3

5-10.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원자력기금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434-402)

담당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계획액		2018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18,596	14,571	14,571	8,981	8,441	△6,130	△42.1

#### ○ 사업내용

- 원자력 R&D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구축, 전략적 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양성 등 연구기반의 확충

### ■ 문제점

-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소듐고속로 이외 기존핵발전소에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규원전인 소듐고속로를 추가 건설해야하는 상황
-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논리에 불과
-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를 연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부지에서 대전 연구소로 위험한 손상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야 함
-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관련 소통절차가 부재
-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사용후핵연료 연구과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때 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
- 오히려 원전 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기술개발, 대피 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이 필요함.

### ■ 의견 : 부분삭감

- 소듐냉각 고속로(SFR) 개발 및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 타당성 검증과 관련한 연구 용역비 및 연구시설 구축비 전액 삭감(과기부 예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연구 과제명 및 비용 미표시)